



문 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 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문 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 ③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 ④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문 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u>(가)</u> | <u>(나)</u> |
| ① | 300        | 100        |
| ② | 300        | 200        |
| ③ | 500        | 250        |
| ④ | 500        | 300        |

문 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및 검사
-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문 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 ② 바우처
- ③ 조세지출
- ④ 직접대출

문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문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

- ① 재택근무형
- ② 집약근무형
- ③ 시차출퇴근형
- ④ 근무시간선택형

문 20.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의 지지	
의제설정 주도자	높음	낮음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	(가)	(나)
국가(state)	(다)	(라)

-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